

【경찰실무종합】 18' (경감)

1.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경감]

- ㉠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판시하였다.
- ㉡ 베를린 시민이 Kreuzberg 부근에서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판결이다.
- ㉢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로서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확립의 계기가 되었다.
- ㉣ 독일에서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된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이 적절하다.

- ㉠ 옳음.
- ㉡ 틀림. Blanco라는 소년이 국영 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관할이 행정재판소로 옮겨지게 된 것은 Blanco판결이다.
- ㉢ 옳음.
- ㉣ 틀림.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의 효시로 평가 되는 것은 띠뚝판결이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경감]

- ① '위험'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한다.
- ②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협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협의 존재를 잘못 추정할 경우를 말한다.
- ③ '외관적 위협'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책임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위험혐의'의 경우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가 적절하다.

- ① 틀림.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옳음.
- ③ 틀림. 외관적 위협에 대한 경찰개입은 적법하며,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 ④ 틀림. '위험혐의'의 경우 위협의 존재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인 위험조사 차원의 경찰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경감]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포함)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甲경정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 강사로 요청받아 월 4회, 1시간 동안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4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하다.
- ④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③)
- ② 틀림.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동강령 제15조 ② 단서)
- ③ 틀림.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옳다.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도 맞음. [19'경감] 정답처리 (동강령 제8조①)

4.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인간관 중 (㉠) 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이고, (㉢) 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 이론에 의한 관리가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된다.

- ① ㉠ X ㉡ 민주 ㉢ Y ㉣ 권위 ㉤ X
- ② ㉠ X ㉡ 권위 ㉢ Y ㉣ 민주 ㉤ Y
- ③ ㉠ Y ㉡ 민주 ㉢ X ㉣ 권위 ㉤ Y
- ④ ㉠ Y ㉡ 권위 ㉢ X ㉣ 민주 ㉤ X

[정답] ③

[해설] ③이 적절하다.

- ㉠ Y ㉡ 민주 ㉢ X ㉣ 권위 ㉤ Y

5.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대한 서술이다. ㉠부터 ㉣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8' 경감]

- ㉠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
 ㉢ 구례 화염사 등 다수의 사찰을 소실로부터 구해내는 등 문화경찰의 발자취를 남긴 문화경찰의 표상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와 시위대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조

- ① ㉠ 김원봉 ㉡ 최규식 ㉢ 차일혁 ㉣ 안병하
 ② ㉠ 김 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③ ㉠ 김원봉 ㉡ 정종수 ㉢ 안병하 ㉣ 차일혁
 ④ ㉠ 김 구 ㉡ 정종수 ㉢ 차일혁 ㉣ 안병하

[정답] ④

[해설] ④가 바르게 나열 되었다.

- ㉠ 김 구 ㉡ 정종수 ㉢ 차일혁 ㉣ 안병하

6. 「경찰법」 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 ①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민주적 결정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행정안전부에 두고, 위원회의 사무도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한다.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가 적절하다.

- ① 틀림. 경찰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를 두고(경찰법 제5조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동법 제10조 ①)
 ② 옳음. 옳다. (동법 제6조 ④)
 ③ 틀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7조 ①)
 ④ 틀림.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동법 제9조 ① 4호)

7.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치안행정협의회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되,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설치하고, 조직·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 중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5조 ①)
- ② 틀림.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동규정 제3조 ①) **위원 중 2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은 경찰위원회**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 ③ 옳음. (경찰법 제16조 ①②)
- ④ 옳음.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3조 ③)

8.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변동·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경감]

-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 ㉡ 「국가공무원법」 상 강입은 하위 직급에의 임용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 ㉢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 ㉣ 경찰공무원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당연 퇴직된다.

- ① 없음 ② ㉠ ③ ㉢ ④ ㉠㉢

[정답] ①

[해설] 적절한 것은 없다.

- ㉠ 틀림.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② 7호)
- ㉡ 틀림.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입)**,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30조 ①)

- ㉔ 틀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7조 ①)
- ㉕ 틀림. 경찰공무원이 제7조제2항(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항 제6호(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공무원법 제 21조)

9.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경감]

-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③이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② 옳음. (동법 제62조)
- ③ 틀림.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에 해당.(동법 제59조의2)
- ④ 옳음. (동법 제61조)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경감]

- ㉑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㉒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㉓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㉔ 소청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다른 비위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징계처분보다 중한 징계를 부과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① ㉑㉒ ② ㉑㉔ ③ ㉒㉓ ④ ㉓㉔

[정답] ①

[해설] ㉑㉒이 적절하다.

- ㉠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8조 ②)
- ㉡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76조 ①)
- ㉢ 틀림. 처분사유서 교부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16조 ①)
- ㉣ 틀림.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소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원징계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또는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⑦)

11. 「국가공무원법」 상 국가공무원의 의무 중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8' 경감]

-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에도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해설] ③이 신분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② 옳음. (동법 제62조)
- ③ 틀림.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의무에 해당.(동법 제59조의2)
- ④ 옳음. (동법 제61조)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15만원이다.
- ②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과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의 합은 23만원이다.
- ③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①이 적절하지 않다.

- ① 틀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는 **10만원**이다.(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호)
- ② 옳음. (동규정 제6조 제2호, 제4호)
- ③ 옳음. (동규정 제10조)
- ④ 옳음. (동규정 제9조)

13. 조직편성의 원리 중 명령통일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경찰의 경우에 수사나 사고처리 및 범죄예방활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결단과 신속한 집행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지시가 분산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면, 범인을 놓친다든지 사고처리가 늦어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에 신속한 대응이 불가하다.
- ③ 관리자의 공백 등을 대비하여 대리, 위임, 유고관리자 사전지정 등이 필요하다.
- ④ 조직목적수행을 위한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정답] ④

[해설] ④가 적절하지 않다.

- ④ 틀림. 계층제에 대한 설명이다.
- ①②③ 옳음. 명령통일의 원칙에 대한 설명.

14.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가 개최되고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한다. 다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 ①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②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③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④ 부별 심사 → 종합정책질의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정답] ②

[해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순서는

종합정책질의 → 부별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순이다.

15.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경감]

- ㉠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행정용·순찰용·특수구난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 ㉡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사용기간, 사용부서 등을 추가로 검토한다.
- ㉣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선임탑승자, 2차 운전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 모두 옳지 않다.

- ㉠ 틀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 ①)
- ㉡ 틀림. (동규칙 제93조 ①)
- ㉢ 틀림. (동규칙 제94조 ①)
- ㉣ 틀림. (동규칙 제98조 ③)

16.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 ① 감찰관은 소속 경찰공무원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찰관은 직무상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공무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감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④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 중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정답] ①

[해설] ①이 적절하다.

- ① 옳음. (경찰감찰규칙 제15조 ①)
- ② 틀림. 경찰공무원등은 감찰관으로부터 증거품 등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조 ②)
- ③ 틀림.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7조 ①)
- ④ 틀림.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동규칙 제23조 ②)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 구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 ① 틀림.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 ② 옳음. (동법 제18조 ③)
- ③ 옳음. (동법 제19조 ①)

④ 옳음. (동법 제20조 ①)

18.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범인성 소질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전해지는 선천적인 유전물질과 후천적 발전요소(체질과 성격의 이상, 연령, 지능 등)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 ②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은 문화적 전파이론이다.
- ③ Shaw & Macay의 '사회해체' 개념에 대비해 Hirshi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하였다.
- ④ Miller는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정답] ③

[해설] ③이 적절하지 않다.

- ③ 틀림. Shaw & Macay의 '사회해체' 개념에 대비해 **Sutherland**는 이를 '사회적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학습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규정하였다.
- ①②④ 옳음.

19. 지역경찰 근무 중 발생한 상황에 대한 각 경찰관들의 초동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경찰관 甲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부상자 구호 및 현장 표시를 한 후 전담 교통경찰에 인계하였다.
- ② 경찰관 乙은 도박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도박용구 및 판돈 등 증거를 확보하고, 판돈은 행위자별로 액수를 확인한 후 구분하여 압수하였다.
- ③ 경찰관 丙은 강제추행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달하였다.
- ④ 경찰관 丁은 주취자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자 적법하게 체증하였고, 주취자가 丁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 ③ 틀림. 강제추행죄가 친고죄가 아님에도 경찰관 丙이 피해자에게 친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그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경찰서에 전달한 초동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 ①②④ 옳음.

20.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자연적 감시’라고 하고,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 ②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영역성의 강화’라고 하고, 종류로는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 ③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를 ‘자연적 접근통제’라고 하고, 종류로는 차단기·방범창 설치, 체육시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등이 있다.
- ④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를 ‘유지관리’라고 하고,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정결유지 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 ③ 틀림. 체육시설에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는 활동성의 활성화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①②④ 옳음.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은폐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② 응급조치상의 격리란 아동학대행위자를 72시간(단,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을 기한으로 하여 피해아동으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 ③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임시조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의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 또는 자유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조치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피해아동이 보호자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지성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②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①③)

- ③ 옳음. (동법 제13조 ①)
- ④ 옳음. (동법 제19조 ①)

22. 「범죄수사규칙」 상 고소·고발이 있을 때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甲이 피의자 乙을 상대로 100만원을 사기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
- ②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며,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도 소명하지 못한 경우
- ③ 고소장에 적시된 명예훼손죄 피의자가 고소장 접수시점 기준으로 이미 사망한 경우
- ④ 시어머니 丙이 며느리 丁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

[정답] ④

[해설] ④가 적절하지 않다.

- ① 옳음. (범죄수사규칙 제42조 ① 제2호)
- ② 옳음. (동규칙 제42조 ① 제3호)
- ③ 옳음. (동규칙 제42조 ① 제4호)
- ④ 틀림. 반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고소고발 반려사유

1.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고발된 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고발된 사건

23.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상 수사사건 등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에 활용된 첨단수사기법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 ④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이 적절하지 않다.

- ① 옳음.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호)
- ② 옳음. (동규칙 제5조 제2호)
- ③ 틀림. (동규칙 제5조 제2호)
- ④ 옳음. (동규칙 제5조 제4호)

▣ 수사사건등의 내용 공개 사유

1. 범죄유형과 수법을 국민들에게 알려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하여 사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속한 범인의 검거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수사사건등의 내용을 알려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4.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 내지 6인을 1조로 상호 연결시켜 포승해야 한다.
- ③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가 적절하지 않다.

- ① 옳음.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9조 ①)
- ② 틀림.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동 규칙 제50조 ②)
- ③ 옳음. (동 규칙 제55조)
- ④ 옳음. (동 규칙 제49조 ②)

25.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복제본'이란 디지털 저장매체 내에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전부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의 기술적 방법으로 다른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 ②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물'이란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관에게 분석의뢰된 디지털 데이터, 복제본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말한다.
- ③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수사관과 증거분석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고유 식별값(해시값) 확인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 ① 옳음.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 ② 옳음. (동규칙 제2조 제4호)
- ③ 틀림.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1조 ①)
- ④ 옳음. (동규칙 제11조 ⑤)

26. 혈흔패턴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사람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움직이면 혈흔궤적(trail)이 형성된다.
- ② 카펫과 같이 흡수성이 높은 표면에는 혈흔이 명확하게 남아있어 방향성 판단이 쉽다.
- ③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지 같은 모양의 혈흔이다.
- ④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정답] ②

[해설] ②가 적절하지 않다.

- ② 틀림. 카펫과 같이 흡수성이 높거나 표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방향성 판단이 어렵다.
- ①③④ 옳음.

27. A경찰서 경비계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소 경비대책을 수립하였다.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경감]

- ㉠ 제1선(개표소 내부)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책임하에 질서를 유지한다.
- ㉡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개표소 안에서 무기 등을 지닐 수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원조요구가 있더라도 개표소 안으로 투입되는 경찰관에게 무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한다.
- ㉢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며, 2선의 출입문은 수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문과 후문을 개방한다.

㉔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 시설이나 예비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정전사고 등에 대비한다.

- ① ㉑㉒ ② ㉑㉔ ③ ㉒㉔ ④ ㉔㉒

[정답] ③

[해설] ㉒㉔이 옳지 않다.

- ㉑ 옳음.
㉒ 틀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 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③) 동법 제6항에서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조요청을 받은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 휴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㉓ 틀림. 제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하고 2선의 출입문은 되도록 정문만을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㉔ 옳음.

28. 행사안전경비 중 부대의 편성과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8' 경감]

㉑ 경력은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㉒ 경력배치는 항상 군중이 집결되기 전부터 사전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㉓ 예비대의 운용여부 판단은 주최측과 협조하여 실시한다.
㉔ 예비대가 관중석에 배치될 경우 관중이 잘 보이도록 행사장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① ㉑㉒ ② ㉑㉔ ③ ㉑㉓ ④ ㉒㉔

[정답] ①

[해설] ㉑㉒이 옳다.

- ㉑㉒ 옳음.
㉓ 틀림. 예비대의 운용여부 판단은 경찰판단하에 실시한다. 주최측과 협조할 사항은 행사진행 과정 파악, 경비원활용 권고, 자율적 질서유지 등이 있다.
㉔ 틀림.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단시간 내에 혼란예상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통로 주변 등에 배치 운용 한다.

29.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 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 ②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 ③ 인질범이 인질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 ④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정답] ②

[해설] ②가 적절하다.

스톡홀름 증후군 (Stockholm Syndrome)	인질사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 이입이 이루어져 상호 간에 친근감이 생겨 경찰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리마 증후군 (Lima Syndrome)	인질사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범이 인질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인질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푸는 등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어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3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상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그에 대한 예시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 A-(㉠), 공무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의 공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 D-(㉡), 유학 - 서울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인 · E-(㉢), 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광고·패션모델로 활동하려는 우크라이나인 · F-(㉣), 결혼이민 -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베트남인

- ① 12 ② 14 ③ 16 ④ 19

[정답] ③

[해설] 2+2+6+6 모두 합한 값은 16이다.

- ㉠ 2 ㉡ 2 ㉢ 6 ㉣ 6

31.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 ()안에 들어갈 용어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1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의 화물자동차

- ① ㉠ 이하 ㉡ 미만 ㉢ 미만 ㉣ 미만
- ② ㉠ 이하 ㉡ 미만 ㉢ 이하 ㉣ 미만
- ③ ㉠ 미만 ㉡ 이하 ㉢ 미만 ㉣ 이하

- ④ ㉠ 이하 ㉡ 미만 ㉢ 이하 ㉣ 이하

[정답] ④

[해설] 적절한 것은 ④이다.

- ㉠ 이하 ㉡ 미만 ㉢ 이하 ㉣ 이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32.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감]

- ①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② 택시 운전자인 甲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에 제한되지 않는다.
- ④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②

[해설] ②가 적절하지 않다.

- ① 옳음. (대법원 2008도7143)
- ② 틀림.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도3970)
- ③ 옳음. (대법원 2004도3600)
- ④ 옳음. (대법원 2007도9598)

33. 정보의 배포 단계 중 보안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통신보안조치 -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는 오늘날 통신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해당한다.
- ② 인사보안조치 -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정보의 분류조치 -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 ④ 물리적 보안조치 -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④가 적절하지 않다.

①②③ 옳음.

- ④ 틀림.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은 정보의 분류조치에 대한 내용이다.

▣ 정보배포의 원칙중 보안성의 원칙

정보의 분류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방법과 열람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 ② 문서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관련 문서의 배포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방법
인사 보안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② 정보배포과정에서는 배포 담당 공무원의 채용과 임명 과정에서의 보안심사 또는 보안서약의 징구, 이들에 대한 보안교육 등의 조치
물리적 보안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리적 보안조치란 보호가치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안조치를 실시하는 방안들을 총칭. ② 정보관리 부서가 속한 건물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과 시설보안의 분야로 분류 ③ 정보부서의 소재지 또는 소재 시설물에 대한 보안조치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배포과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낮음. ④ 정보배포기관 또는 부서, 정보배포를 위한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보안조치가 필요.
통신보안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래의 통신보안은 전선과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도청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주요한 통신수단으로 컴퓨터통신이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됨. ②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는 오늘날 통신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해당 ③ 정보배포수단으로 전선과 전파,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는 필수적임.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경감]

- ①甲단체가 A공원(전북군산경찰서 관할)에서 옥외집회를 갖고, B광장(충남서산경찰서 관할)까지 행진을 하려는 경우 甲단체의 대표자이자 주최자인 乙은 경찰청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은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신고서의 형식적인 미비점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보완 통고를 할 수 있다.
- ③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③

[해설] 적절한 것은 ③이다.

- ① 틀림.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 ② 틀림. 신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서울고법 98누11290)
- ③ 옳음. (동법 제6조 ③)
- ④ 틀림.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철회신고서제출)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26조 ①)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틀렸다.

35. 다음 ()안에 들어갈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8' 경감]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한 사람은 (㉠)이고,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다.

- ① ㉠ Ericson ㉡ Crandon
- ② ㉠ Crandon ㉡ Sir Robert Mark
- ③ ㉠ Sir Robert Mark ㉡ Ericson
- ④ ㉠ Sir Robert Mark ㉡ Crandon

[정답] ④

[정답] ④

[해설] ④가 바르게 나열 되었다.

- ㉠ Sir Robert Mark ㉡ Crandon

36. 공산주의 경제이론(마르크스의 경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잉여가치설 -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이론이다.
- ② 노동가치설 -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을 생산한 노동이 형성하고, 가치의 크기는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결정한다는 학설이다.
- ③ 자본축적론 - 자본주의적 생산 초기에는 축적된 자본의 절대량이 적어 자본가가 소비를 억제하지만, 잉여가치의 축적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치와 낭비·정치적 비용·유통비용 등이 증가하게 된다고 본다.
- ④ 궁핍화이론 - 자본 축적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가 계급의 부는 늘어나지만, 노동자 계급은 점차로 궁핍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①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 ① 틀림. 자본가가 지불한 노동력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된 잉여가치가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이론은 **자본축적론**이다. 잉여가치설은 자본주의가 노동의 잉여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자본가적 생산의 반도덕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론이다.
- ②③④ 옳음.

37. 공작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 ① '관찰묘사'란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관찰과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묘사로 구분된다.
- ② '가장'이란 정보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요소의 정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꾸며지는 외적·내적 형태를 말한다.
- ③ '연락'이란 비밀공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하급 인원이나 기관 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첩보·문서·관념·물자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구된 수단·방법의 유지 및 운용을 말한다.
- ④ '신호'란 비밀공작활동에 있어서 조직원 상호 간에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해 놓은 표시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① 틀림. '관찰·묘사'란 경험을 재생하여 표현·기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묘사와 일정한 목적 하에 사물의 현상 및 사건의 전말을 감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관찰로 구분된다.

②③④ 옳음.

38. 북한이탈주민의 개념과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 정부의 해외공민증과 중국정부의 외국인 거류증을 소지한 채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를 '북한국적 중국동포(조교)'라고 부른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등급으로서 '나급'은 거주지 보호대상자 가운데 북한에서 중요 직책에 종사하여 신변위해를 당할 잠재적 우려가 있는 자와 사회정착이 심히 불안정하여 특별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정답] ③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① 옳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옳음.

③ 틀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9조 ①)

④ 옳음.

39.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 경감]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정답] ③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③ 틀림.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①②④ 옳음.

4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상 감사결과와 조치기준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 경감]

- ①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권고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변상명령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요구, 경고·주의, 개선 요구, 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④가 적절하다.

- ① 틀림. 개선 요구는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이다.(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 제21조 4호)
- ② 틀림. 권고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이다.(동규칙 제21조 5호)
- ③ 틀림. 변상명령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하할 수 있는 조치이다.(동규칙 제21조 7호)
- ④ 옳음. (동규칙 제21조 6호)

■ 감사결과와 조치기준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피감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